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최종 토론

“가입기간 늘려 보장 키워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줘야”

(보장강화 중심 의견)

(재정안정 중심 의견)

보장강화 vs 재정안정 ‘팽팽’
기초연금 지급 기준 등 이견
급일 시민대표단 최종안 공개



한 시민이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방문해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 설정을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가 종료되면서 최종안 도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구조개혁, 기초연금 등을 놓고 ‘보장강화 중심’과 ‘재정안정 중심’의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시민대표단의 최종안이 22일 공개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최종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앞선 세 차례의 토론에서 다룬 ▲연금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연금 구조 ▲기초연금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토론은 ‘보장강화 중심’과 ‘재정안정 중심’ 두 입장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보장강화 중심’ 측은 현행소득대체율(40%)을 50%까지 상향하고, 가입기간을 늘려 보장 금액을 늘리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지급액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현 청년세대는 노인이 됐을 때 높은 빈곤율에 시달리게 된다”며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10년 가까이 연장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올려야만 노후에 최소생

활비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오는 2060년 공적연금 지출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12.1% 수준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더라도 GDP 대비 지출액은 13.4%에 그친다”라며 “이는 유럽연합 평균인 13.9%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재정안정 중심’ 측은 현행소득대체율(40%)을 유지하고, 단계적인 재정안

정화 계획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부과될 부담을 줄이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예상 기금소진연도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전반적 결과를 보여줄 뿐 소득대체율 상승에 따른 후반적 결과는 보여주지 못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부과방식 보험료율이 35%에서 43%로 25% 가까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치지도 미래세대에게 힘겨운 수준인 만큼 연금개혁이 지체된 와중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에서는 ‘노인 빈곤 완화’라는 목표를 두고 양 진영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현행 지급 기준(소득 하위 70%)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지급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빈곤 감소와 국민연금의 보장강화라는 두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 그 역할이 확대됐

을 때 기초연금의 역할 비중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기초연금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노인 빈곤의 해결”이라며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소득하위 70% 기준선에 맞추기 위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덜 가파르게 높여가면서 빈곤한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대표단은 최종 질의응답을 마치고 연금개혁 최종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22일 공개된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시민대표단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학습과 숙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론화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i1231@metroseoul.co.kr

엔비디아, 주가 10% 폭락

19일 기준 762弗... 단기조정 시각 우려
삼성전자 등 자체 AI칩 개발 영향도

엔비디아(NVIDIA) 주가가 하루 사이 10% 폭락했다. 단순 조정이라는 시각 속에 탈(脫) 엔비디아를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시화 된 것도 이유라는 분석이다. 올 1분기 엔비디아에 대항할 자체 AI 칩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기업에는 삼성전자와 오픈AI를 비롯해 M S,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업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 시각)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전일보다 10% 급락한 762달러에 마감했다. 지난 2월21일 기록한 674.69달러 이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지난달 25일 950.02달러 대비 24.6% 하락했다.

이번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은 TSMC가 올해 파운드리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하향조정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애플·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아마존·엔비

디아·테슬라·메타 7개 기업을 뜻하는 매그니피센트7(Magnificent7) 소속 기업 중 다수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타난 수익화가 더해지며 하락세에 가속화가 붙은 것으로 분석된다.

단기 조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시화 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지난 1분기엔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탈 엔비디아 선언이 이어졌다. 삼성전자도 독립적으로 AI 반도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AI 칩 설계 관련 연구조직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현 기자 seoh@

“개인투자자 관심 증명... 다시 유예라도”

▶▶ 1면 ‘금투세 폐지 국민요청’서 계속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도입 시 ‘과세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6개월 정도라고 예상하면서도 이에 따른 소요 재원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시간이야 반년쯤 걸린다고 말하지만 이런 일정을 소화하려면 추가인력도 필요하고 이를 마련할 수 없는 중소증권사들은 내부 인력이 훅사 당할 가능성도 높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국민청원은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29일로 끝나기에 국회 본회

의 심의·의결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청원도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이번 청원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얼마나 금투세에 관심이 많은지 증명된 것”이라며 “22대 국회 개인 이후 다시 청원이 올라올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주요 금융투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2대 국회에도 금투세 폐지 관련 청원을 이어가야 한다”며 “폐지는 아니라도 다시 유예라도 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허정윤 기자 zekova@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이사 남보라

홍보이사 정준호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필 제24-088(2024.3.11~2025.2.28)
위 정보는 내부망에 기재된 대로 관련 실적을 9개 적용한다. (연간소득 1억 원) 노란우산은 현금보유액에 따라 계급보유금까지 보호하지 않음. 중소기업가입부기 검토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적 공제금도 1억 원 이상 중소기업중앙회 1억 1000에 따라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지원금 보호를 위해 해 별다른 납부금을 포함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함.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연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